

여성민우회 조사
서울시
전업주부

“부부간 증여·상속세 징수 부담하다”

재산은 부부 공동소유 인식 불구 남편 명의 82.8%나

개정가족법의 범규정과는 반대로 배우자간의 증여나 상속에도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내년도 <정부 세제개편안>에 대해 주부들이 강한 불만과 ‘부당하다’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.

최근 한국여성민우회(회장 한명숙)가 서울시 일원의 전업주부 7백31명을 상대로 실시한 <가사노동 가치와 세법에 관한 설문조사>에 따르면 결혼 후 모은 재산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현행세법에 대해 86.5%의 주부가 “함께 노력해 모은 재산이므로 세 부과는 부당하다”고 응답했고 81.1%가 전업주부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.

이는 1가구 1주택에 한하여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하든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자 주부들이 현행세법은 물론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남편의 소유권만을 인정하는 현실에 강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된다.

재산소유에 대한 인식을 묻는 항목에서 89.3%가 “한 가정의 재산은 부부공동 소유”로 응답했고, 2.7%만이 “법률상 명의자”, 7.3%가 “기여도에 따라 다르다”라고 해 절대다수가 한 가정

의 재산은 부부공동의 몫으로 생각하고 있었다.

또 살림만 하는 주부의 경우 결혼 후 모은 재산의 몇 %를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“20~30%가 내몫이다”에 13명(1.8%), “30~40%”가 63명(8.6%), “40~60%”가 5백83명(79.9%) 등으로 응답자의 80%가 절반 정도는 자신의 몫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.

결혼할 당시의 재산과 비교할

때 현재의 재산은 얼마나 증감했느냐에 대해서는 47.6%가 “100% 이상 늘었다”고 했고 15.6%가 60~100%증가, 17.1%가 30~60% 증가했다고 응답. 주부들은 또 이러한 재산증가에 기여한 사람으로 69.6%가 “부부공동”이라고 했으며 “남편”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9.0%, “부인”이라고 한 사람은 6.2%로 절반 이상의 주부가 자신의 기여도를 높이 평가했다.

이러한 주부 자신의 재산증식 기여도나 재산은 부부공동의 소유라는 높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전체 주부의 82.8%가 현재 재산이 남편명의로 되어 있고 부부공동 명의는 7.5%, 본인 명의는 5.2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공동소유 등에 대한 주부들의 의식과 상관없이 재산은 주로 남편명의로 되어 있음을 보여준다.

재산이 주로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 주부의 40.5%가 “남편이 가장이므로 당연하다”고 했고 13.4%는 “남편이 주로 돈을 벌었기 때문”으로, 27.8%는 “공동명의로나 부인 이름으로 하고 싶었으나 세금 때문”으로, 10.5%가 “남편의사에 따라서”로 응답하고 있어 38.3%가 재산이 남편명의로 된 것에 문제를 느끼고 있었다.

한편 주부들은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어 가사노동에 대한 요구임금은 35~50만원선이 41.2%로 가장 많았고 35만원 이하가 10.8%에 비해 1백만원 이상도 13.7%였다.

여성민우회는 이번 설문조사 자료와 여성계의 의견을 담은 <세법개정에 대한 의견서>를 국회 재무위원회에도 제출했다.

여성신문 만평 반쪽이

